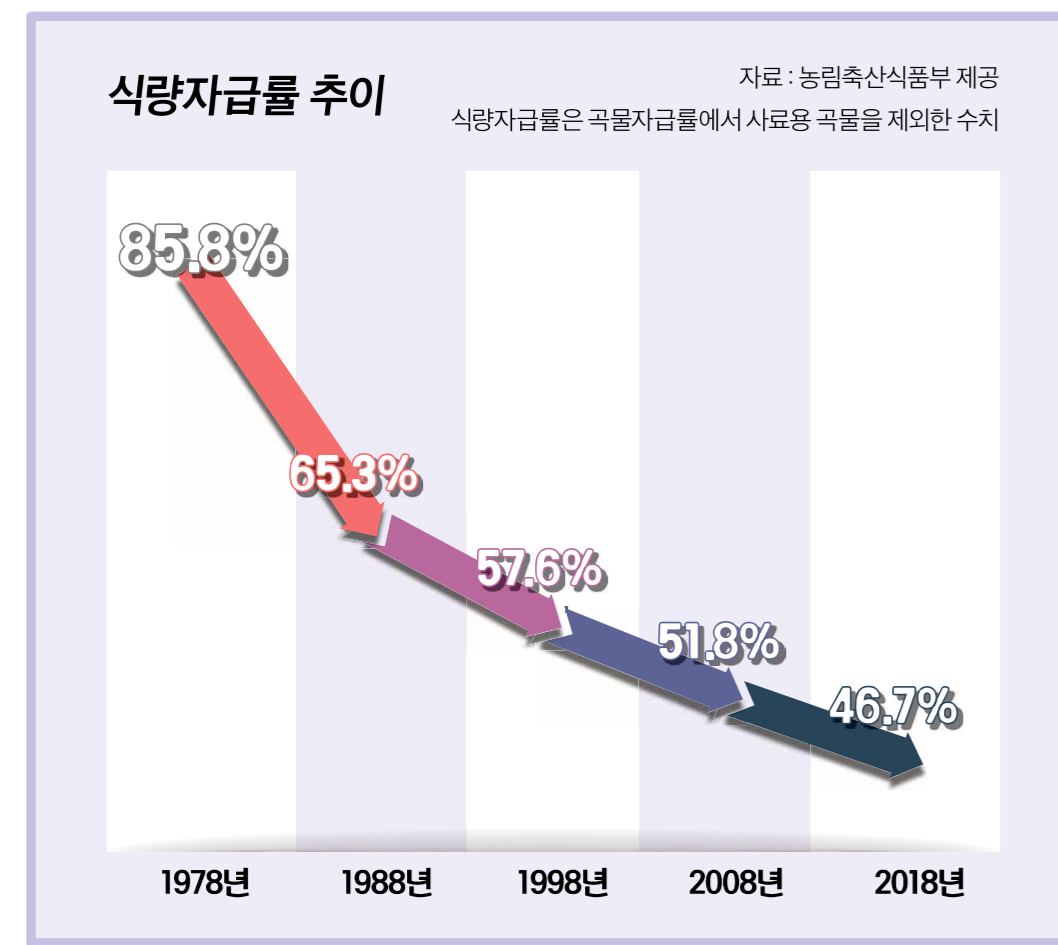


코로나19, 식량안보를 묻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식량안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 본보는 식량안보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가시화된 위태로운 식량안보



지난 100년간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풍성한 식량을 누렸다. 각종 곡물과 채소, 육류와 해산물을 한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건 활발한 무역과 첨단 농·축·수산 기술이 합쳐진 21세기의 특권이었다. 1978년 85.8%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018년 46.7%로 떨어져도 풍족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던 이유다.

그런데 지난 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국경이 봉쇄되자 세계 식량 유통에 빨간 등이 켜졌다. 먼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를 공식 경고했다. FAO는 지난 3월 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제한돼 식량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자국의 식량 비축을 위한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났다. 연 50만 톤의 쌀 수출국 캄보디아는 3월 5일부터 쌀 수출을 금지했다. 세계 3위의 쌀 수출국 베트남도 3월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다. 러시아도 3월 20일부터 모든 종류의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고 카자흐스탄-세르비아

동맹 생산국들도 밀 수출을 제한했다. 우리나라의 밀 생산량은 1.2%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전 등 밀로 만든 먹거리 공급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컨설팅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식량 가격 급등에 가장 크게 타격받을 나라로 한국, 중국, 일본과 중동을 꼽았다. 2017년 우리나라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181억 300만 달러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

한국우리밀협동조합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3.4%다. 쌀 자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다. 콩의 자급률은 25.4%, 옥수수 자급률은 3%에 불과했다. 자급률이 낮은 곡물에 대한 인간의 수요를 줄이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소, 돼지, 닭 등의 사육에 곡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 식량 위기로 농촌 고령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2015년 농촌 평균 연령은 66세에 달했다. 그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로 보충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90일 단기 비자를 발급해 농번기

농촌에 노동력을 공급했다. 올해 전국 각 지자체에 배정이 예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만 4,5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농촌 일손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각 지자체는 공무원·군인 또는 자원봉사자를 동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를 진행해 노동력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선 식품 가격 급등과 같은 눈에 띄는 식량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쌀·감자·고구마의 자급률이 100%에 달하고 수입 곡물도 2~3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덕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 자급률은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다. ‘농사는 농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처럼 그는 국가가 정책을 마련해 식량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농업인의 삶을 개선하는 삼농 정책을 제안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수면 밑에 잠겨 있던 우리나라 식량안보 문제를 드러낸 지금, 21세기 삼농 정책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 보인다.

신승희 기자 sghee@

코로나19로 각국이 식량 이동을 제한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에 식량난이 없더라도 최소한 주식에 대한 자급률은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70년대 말 80%에 가까웠지만 2018년 기준 46.7%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왜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가 됐을까.

자율무역 외에도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쌀 중심의 식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89년(121.4kg)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지난해 33.0kg으로 늘어난 ‘제2의 주식’이 됐다. 하지만 밀은 국내 생산량이 취약해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정부 차원의 노력 미흡하단 지적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호 농업개혁위원장 등은 식량 자급률을 매년 높이기 위해 일일 곡

철폐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꾀했다. 한국은 쌀·사과·배와 고을 관세 민감 품목인 370여 개의 농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수입할 때 점진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자유무역 외에도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쌀 중심의 식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89년(121.4kg)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지난해 33.0kg으로 늘어난 ‘제2의 주식’이 됐다. 하지만 밀은 국내 생산량이 취약해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정부 차원의 노력 미흡하단 지적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호 농업개혁위원장 등은 식량 자급률을 매년 높이기 위해 일일 곡

갈수록 떨어지는 식량자급률, 원인은?



일러스트 승선우
이진우 기자 jyun261@

KB금융그룹 | **세상을 바꾸는 금융**

2020년 5월 금리인상/비차·중고차대출을 대비하기 위한

중고차 매물 대수 1위 KB차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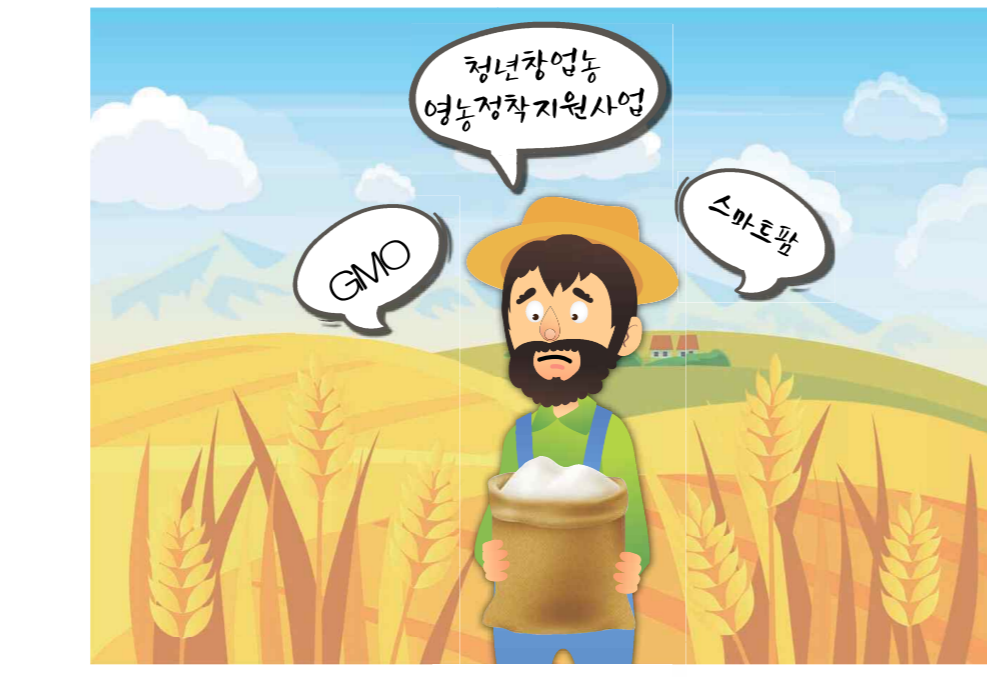
비교할 자가 많으면 좋은 차만 기가 쉬워집니다!

비교할 차가 많은 KB차차차에서 가능한 서비스

- 실차주 매물 확인
- 구매된 차차차
- 팔려진 차차차
- 바뀌된 차차차

KB캐피탈

위협받는 식량안보, 그 해결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자국의 식량 공급망이 불안정해졌고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중단은 농촌에 큰 타격을 입혔다. 주요 국가들이 식량을 국내에 비축하고 수출 물량에 제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 농촌이 향후 식량 생산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농산물 생산 기반을 늘리는 것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생산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침체한 농촌 지역을 활성화해 국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을 농업·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실시한 ‘청년창업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농지임대·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한다. 올해 선발된 1,600명의 영농정착을 보면 1,051명(65.7%)이 창업에 정착했다. 이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년 면접평가의 한 심사위원은 ‘중·장년층의 영농단체 대표들이 대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낮은 청년 이해도를 보였으며 현 사업이 취지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농정 및 통상정책과 더불어 보완적 역할로써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공학과 박현진 교수는 ‘2019 식량안보 세미나’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과 같은 농업과 식품 분야의 첨

식량안보를 바라본 농민의 시선

친환경 농민과 관련 소비·유통·가공 법안들은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친환경 농업협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친환경 농축산물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돼야 진정한 식량 안보가 이루어진다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량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어린이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창하는 인천친환경농업협회의 김정택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의 미래를 물었다.

이혜연 기자 at6561a@

1. 대한민국 식량자급 전망은?

대한민국은 식량 수입국이다.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무역협상에서 농축산물을 의무 수입하기로 합의했기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식량 수입국으로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수입국의 지위와 식량 자급 가능성은 별개다. 만약 정부가 농산물을 정책적으로 수매해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 시킨다면 농산물에

2. 농촌 노동력 문제 해결방안은?

초고령화 사회인 농촌에서 대농이나 축산업을 하려면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하우스 채소의 경우 대량 기계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축산업, 곡물 생산과 달리 일일이 수확해야 하므로 기계화가 불가능해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생산이 어렵다. 그렇다고 신선한 채소를 포기할 수도 없기에 직거래나 도시농업처럼 소비자가 생산에 동참하는 대안이 필요할

3.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특히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연결해 계획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통적 제도인 이월호 명예이사장은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도 스스로 식량 확보를 할 수 있는 식량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식품 산업의 국제교역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끼고 절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은 식량 공급을 위한 한국 농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지 기자 hjeiee00720@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의 고장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반도체를 만듭니다

We Do Technology SK hynix